



제267회(임시회) 제2차본회의
2008년 2월 1일 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8. 2. 1.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월 14일
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 : 2008년 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8. 1. 28 제267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이장길 기획관리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 및 『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』 등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폐교재산 대부료의 연간 감면 한도를 용도별로 변경(안 제34조제2항)

- 사회복지시설·교육용시설·문화시설·공공체육시설·소득증대시설로 폐교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연간 감액 한도를 70퍼센트에서 사회복지시설·교육용시설·문화시설·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로,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30퍼센트로 변경함
-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 규정 마련(안 제34조제3항 신설)
 -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비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
 - 중앙행정기관 : 100분의 80
 - 기타 공공기관 : 100분의 50
-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(안 제41조제4호)
 -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되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함
 - 분할매각 하는 경우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고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도록 함
-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를 인상(안 제63조제1항)
 -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
 - 은닉재산 종류별 보상 한도를 필지별 100만원, 200만원에서 300만원, 600만원으로 인상함

Ⅲ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수석전문위원 이명우)

○ 본 조례안은 『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』을 비롯한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 조례개정(안)을 수립·제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,

- 『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』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
·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비율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1000분의 70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던 것을

· 사회복지시설, 교육용시설, 문화시설, 공공체육시설은 1000분의 500, 영농조합법인 등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000분의 300의 한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감액대상 확대와 용도별 차등 감액의 기준을 정립하였고,

- 『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근거설정,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의 개정으로 잡종재산의 수익계약매각 대상요건의 일부 변경과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

-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개정 및 위임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

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제1호중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"을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중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6조"을 "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"로 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1. 사회복지시설·교육용시설·문화시설·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1천분의 500
2.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1천분의 300

③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.

1. 중앙행정기관 : 100분의 80
2. 기타 공공기관 : 100분의 50

제41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중 “토지(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)”을 “토지(다만,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)”로 하고, “분할매각 할 수 있다.”을 “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, 매각 시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1호” 를 “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, 시·군의 읍·면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”로 한다.

제45조를 삭제한다.

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200만원”을 “6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중 “1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본청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교육청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 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.</p> <p>4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----- ----- -----</p> <p>1.----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----- ----- -----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1조(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)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34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 3조의 2</p>	<p>제34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 3조의 2</p>

현행	개정안
<p>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복지시설·교육용시설·문화시설·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1천분의 500 2.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1천분의 300 <p>③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 46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앙행정기관 : 100분의 80 2. 기타 공공기관 : 100분의 50
<p>제41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영 제 38조제 1항제 2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(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.)에 있는 	<p>제41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	<p>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.</p>
<p>5.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제45조(분수림의 설정)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「산림법」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63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,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.</p> <p>1.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.</p> <p>가.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시의 동지역에서는 50제곱미터 이하, 시·군의 읍·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----- -----</p> <p><삭제></p> <p>제63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----- ----- ----- -----3천만원----- -----</p> <p>1.----- -----600만원----- ----- -----</p> <p>가.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.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.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 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 로 <u>100만원</u>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 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.</p>	<p>----- 나.----- ----- ----- 2.----- ----- <u>300만원</u>----- -----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18조(교육감)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·도에 교육감을 둔다.

②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·도를 대표한다.
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)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(이하 "지역교육청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31조(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

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(이하 이 항에서 "입체이용저해율"이라 한다)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,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.

제47조(분수립의 설정) <삭제>

제84조(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)

②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.

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제3조의2(대부료의 감액 등)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사회복지시설·교육용시설·문화시설·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
2.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

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46조(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·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,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43조(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)

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건축법

제49조(대지의 분할제한)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.

□ 건축법시행령

제80조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) 법 제4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.

1. 주거지역 : 60제곱미터
2. 상업지역 : 150제곱미터
3. 공업지역 : 150제곱미터
4. 녹지지역 : 200제곱미터
5.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: 60제곱미터